

|          |  |
|----------|--|
| 의안<br>번호 |  |
|----------|--|

|          |
|----------|
| 의결<br>사항 |
|----------|

#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       |              |
|-------|--------------|
| 제안자   | 강승수 의원 외 13인 |
| 제안연월일 | 2022. 4. .   |

#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제안연월일 : 2022. 4. .

제 안 자 : 강승수 의원 외 13명

## 1. 제안이유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며, 그로 인해 비수도권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음. 현재 소멸 위험 시·군·구는 2015년 33곳에서 2021년 106곳으로 3배 넘게 증가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 1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엔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최대 15%인하 시 신규투자 10조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리쇼어링 효과 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구미 경실련 및 구미상공회의소에서도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건의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과감한 지역육성책을 통한 균형발전의 실현을 주문하고 있음.
- 이에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42만 구미시민의 염원을 담은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 2. 주 문

- 붙임 건의문과 같음
- 붙임 :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 건의문

2022. 4. 19.(화)

-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구 미 시 의 회

# 비수도권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촉구를 위한 건의문

대한민국 두 번째 분단! 한계선을 넘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에 대한 충격적이면서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며, 수많은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토 면적 11.8% 크기의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매출 1,000대 기업의 74.3%(100대기업 중 86곳), 상장기업의 72%, 기업체 본사의 56.9%가 집중됐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 55조 5,132억원 중 71.7%인 39조 8,240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비수도권은 28.3%에 불과했다.

국토 12%에 사는 수도권 국민이 돈과 일자리, 문화를 과점하는 세계적인 기형국가 대한민국, 비수도권 국민의 눈엔 결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국가다.

2019년 구미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 의향서 용인시 제출, 지난 2월 포항시민들이 몸살을 앓았던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건립 저지 범시민 운동 사례처럼 “석·박사급 인재를 모시려면 판교도 멀다”는 기업의 인재 확보 경쟁에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뒷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을 정부에서 시행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7년, 10년 등 한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 11월 발표한 정책 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는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최대 15% 인하할 경우 신규투자 10조원 증가와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져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기업, 일자리, 인구, 문화 등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 차원의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안정돼야 저출산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은 ‘비수도권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임을 강조하며 법인세율 지방차등제의 도입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42만 구미시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한다.

2022. 4. 19.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